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윤호중·최혁진·이학영
김원이·소병훈·박용갑
김영배·조승래·송재봉
양부남·임호선·박정현
이해식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정의함.

나. 공익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공익사업의 범위에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 범위를 넓힘.

다. 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1) 공익법인의 인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공익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3) 공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4)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인가 등(안 제22조, 제23조)

- 1)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함
- 2) 공익위원회는 인가를 신청한 법인이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가함.

마. 공익법인 지원(안 제24조)

- 1)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2)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안 제25조)

- 1)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2) 공익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

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사. 공익법인의 합병(안 제38조)

- 1)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2)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3) 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아.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안 제41조)

- 1)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한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함.
- 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원래 주무관청은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익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함.

자. 공익법인의 인가 취소 등(안 제44조 및 제46조)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인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6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관리·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과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지급 및 학술·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

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환경보전 및 공중의 위생·보건·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아.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취업, 창업 지원 및 고용창출 기여 등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정책 개선 및 정보공유 활동에 관한 사업

카.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익법인의 운영,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제2장 공익위원회

제4조(공익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인가 및 인가취소
2.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3. 공익법인 합병의 인가
4.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 감독 및 감사
5.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6.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 및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연구, 정보 수집, 비영리법인 감독지침 수립 제공 등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중립성 등)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공익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률 또는 회계·재무 관련 업무를 하는 직(職)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법률, 회계, 재무 및 공익사업 관련 분야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공익사업에 관한 행정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④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상·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상임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 또는 감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임원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손해
사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개최시기와 임시회의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공익법인 인가 취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20조(위원회 회의 및 활동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위원회에 파견된 직원

제3장 공익법인의 인가 및 지원

제22조(공익법인 설립인가) ①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설립발기인은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2. 공익법인의 정관

3. 재산목록(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
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및 그 증빙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
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제3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설립을 인가한다.

1.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3. 목적 및 활동이 공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출연재산의 수입·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재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5. 5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6.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7. 정관의 내용이 제4장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8. 공익법인의 인가 처분일 이전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9. 정관의 내용상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10. 정관의 내용상 이사, 감사, 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1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1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공익법인인가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 인가요건의 세부 기준, 인가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익법인전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결을 거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단법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

2. 사단법인은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

② 전 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사업수행에 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22조제3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 신청을 위한 정관 변경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민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에 관하여 제2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2조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 후 공익법인은 설립등기 전 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제24조(공익법인지원)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 ① 공익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

부금품”이라 한다)을 모집(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 및 모집장소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3. 모집금품의 사용방법(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의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및 사용기간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계좌 정보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의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익법인의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공익법인의 운영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사항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목록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8.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익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수를 증감할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위원회에 임원 선임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인의 수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감사는 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⑧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⑨ 공익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임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원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은 상근임원과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의 수수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31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감사
2.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에 대한 이사에의 제출 요구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이사에의 의견 진술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이사회 회의록에의 기명날인
5.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

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

6. 제5호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공익법인의 재산) ①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재산과 그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2.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이나 담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처분 또는 관리행위

③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회계연도의 기부금 모집 사항,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그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제38조(합병) ①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총사원 4분

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9조(합병의 등기) 공익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합병으
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해산등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력 발생) 공익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9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
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장 공익법인의 감독

제41조(공익법인의 주무관청) ①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무관
청은 위원회로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이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법
인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위원회에 이송하

여야 한다.

제42조(시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 또는 그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해당 임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령·배임 또는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공익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1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겸직한 경우
5. 제2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선임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위원회가 해당 공익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항제1호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횡령·배임, 회계부정,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 ① 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임원이 시정명령 기간에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공익법인의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의 사유가 소멸되면 위원회는 그 명령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44조(공익법인 인가 취소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익사업의 실적

이 없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설립 인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제45조(청문) 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설립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공익법인의 검사·감독 및 감사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게 관계 서류,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익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직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29조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자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명령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보는 법인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이 소관하던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이 한 허가 등의 행위와 주무관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위원회가 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익법인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률 제2814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
2.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공익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③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나목 단서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④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1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

익법인”으로 한다.

⑥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된”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⑧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6호 중 “국가기관·공익법인”을 “국가기관·공익법인”으로 한다.

⑩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

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⑫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전단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⑭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⑮ 보훈기금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⑯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⑲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㉔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㉖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9제5항 전단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㉗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

㉖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6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㉗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된”으로 한다.

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민법」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㉖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아목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㉗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③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된”으로 한다.

④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으로 한다.

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⑦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